

# 사회 탐구 영역(정치)

##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①    5. ②  
 6. ④    7. ④    8. ②    9. ②    10. ①  
 11. ③    12. ④    13. ⑤    14. ①    15. ④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①

## ◆해설

1. 자녀의 입학 신청을 거부당한 갑이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판례이다.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④는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당의 후보자 결정 유형에서 당원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상향식 의사 결정 가능성이 높고,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하향식 의사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C 유형의 경우는 둘 다 수준이 높으므로 둘 사이의 합리적 의사 조정이 필요하다.
3. 갑의 주장은 세계화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을은 오히려 세계화가 선진국에의 종속 현상을 심화시켜 남북 문제가 심화된다는 입장이다. ②는 을의 입장이다.
4. (가)는 홉스의 주장이고,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가.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군주가 주권자가 된다고 본다. 나. 홉스는 사회 계약론자이므로 계약은 개인들 상호간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 로크는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라.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했으므로 계약 성립 후에도 저항권을 가진다고 본다. 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5.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와 국제 평화주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또한 궁극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 ② 국민 주권주의나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6. 선출직 시장의 독단적 정책 시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의 요소로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가. 주민 소환제, 나. 주민 감사 청구 제도, 다. 주민 발안 제도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이다.

7. (가)는 광역 의회, (나)는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지방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단체장은 집행 기관이며, 우리나라는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1인 2표제를 실시하여 비례 대표를 구성하고 있다.
8. (가)는 냉전 체제를, (나)는 1960년대 냉전 완화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는 탈냉전기를 나타내며, (라) 시기는 9·11 테러 이후 문명 간 충돌이 빈번한 시기이다. ① 냉전기에는 우방국 위주의 외교 정책이 주류인 시기이고, ③ 탈냉전기에 냉전이 해소되면서 북한을 포용하려는 햇볕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이며, ⑤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시기이다. ②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 정책은 1980년대 말 외교 정책이다.
9.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를 나타낸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각료에 대한 의회 동의를 가능하며, ① 대통령제는 의회 해산권이 없으며, ③ 탄핵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④ 행정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며, ⑤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에 비해 행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10. 제시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절차가 까다로워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법치주의 때문에 민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제도가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나타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1. 갑은 국제 관계에서 이상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을은 현실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는 국제평화를 위해 비정부 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집단 안보를 강조한다. 그에 반해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홉스식 자연 상태로 파악하며 자국의 실리 추구가 우선이라고 본다.
12. 학습 자료는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의 문제점에 대한 글이다. ① 현대 국가에서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오류 수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며, ② 다수에 의한 결정은 결코 공동체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류 수정에 필요한 과제이며, ③ 근대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아테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한 오류 수정을 위한 과제이며, ⑤ 아테네가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는 오류 수정에 필요한 과제이다.

13. 표는 의회 지역구 선거와 A 지역 광역 의회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것이다. 11대 선거는 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 광역 의회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2대 선거는 의회 선거가 소선거구제이며, 광역 의회 선거가 중선거구제이다. 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나 12대 광역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이다. 나. 단서에 무소속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후보는 정당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광역 의원은 중앙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다. 11대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이므로 한 지역구 내에서 당선자 간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12대 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므로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14. ① 11대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이므로 한 지역구에 2명 이상 출마가 가능하다. ② 12대 의회 선거에서 (나)당은 의석수는 30석(30/200)이고 정당 득표율은 17%이다. ③ 12대 의회는 (가)당이 200석 중 110석을 차지했으므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다. ④ (다)당은 12대 의회에서 의석이 27석에서 50석으로 원내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⑤ (다)당은 11대 정당 득표율이 14%일 때 의석 점유율은 27/200 이었다. 12대 때는 득표율이 28%에 의석수는 50/200 이므로 오히려 약간 왜곡 정도가 심화되었다.

15. 대의제의 문제점으로 의회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다.

16. (다) 집단은 정당, (라) 집단은 시민 단체, (마)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①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행사한다.

17. 선거권은 권리의 성격과 국민 주권 행사라는 의무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 ① 선거에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② 공직 취임권을 제한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㉔, ㉕은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느 것이 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다.

18. 국가 형성에서 (가)는 착취설(실력설)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사회 계약설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는 전체주의 국가관에 해당한다. 가. 입헌

군주국은 사회 계약설에서 주장되며, 라. (가)와 (나)는 실질적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19. 제시문에서 ‘여론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여론을 거슬러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소수자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 (가)는 1국 1표의 원칙으로 다수결(2/3 이상)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별국은 동등하다고 보고 있으며, (나)에서 경제력에 따라 투표권 차등 배분하며 투표권의 85% 이상 찬성인 경우 의결되는 방식이므로 15%를 초과하는 투표권을 가진 국가는 실질적 거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모든 상임 이사국의 찬성 투표를 포함해야 되므로 상임 이사국이 반대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고, 라. (나)와 (다)의 의사 결정 방식은 약소국에 불리하며, 마. (나)와 (다)는 개별 국가 간 투표권의 차등이 발생하므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